

“전시 재정 편성 각오... 더 과감한 재정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향후 국가 재정운용 방향에 관해 “전시(戰時)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할을 충동원해야 한다”며 기존의 확장 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현재의 경제 위기를 ‘경제 전시 상황’에 비유하며

문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서... 확장 재정 기조 재확인

“재정, 국민 고통 해결·경제 회복 마중물 역할 해야”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국제 통화기금(IMF)이 ‘지금 과감한 재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향후 5년 간 국

가 재정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최고위급 의사 결정 회의체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국가 재정전략 수립이 주요 의제로 논의의 테이블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다.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담아야 하고, 경제 위기 국면에서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앞장 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IMF는 올해와 내년의 글로벌 국내총생산(GDP) 손실 규모가 일본과 독일 경제를 합친 것보다 더 클 것이라고 전망한다”며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와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 세계 170개 이상 국가에서 1인당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수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항공·관광·외식업 등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며 고용 충격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당국이 그동안 건전성에 중점을 두며 확장 재정의 역할을 비축해 온 것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벌써 전 세계가 너나할 것 없이 재정을 충동원하고 있다”고 확장적 재정 정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어 “이미 발표된 총재정 지원 규모가 세계 GDP의 10%에 해당하는 9조 달러에 달한다. 우리도 다섯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중소기업, 고용 취약계층, 피해 업종, 기간 산업 등에 총 250조 원을 투입하는 특단의 결정을 내렸다. 우리 GDP의 13%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어려울 때 재정이 큰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하지만 고용·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 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1.2차 추가경정 예산(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고용안정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 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라며 “재정이 경제 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준비해야 한다”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서 준비하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디지털 경제 시대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해 복지 제도를 확충하고 공공경제 개혁도 멈추지 않고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버스·택시·비행기
이용시 마스크 착용해야
중대본, 교통분야
방역 강화방안 발표

앞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대중교통과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교통 분야 방역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26일부터 승객이 버스나 택시를 탑승할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해 관할 시·도지사가 개선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탑승객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사업정지나 과태료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준다.

또 오는 27일 자정(0시)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한다.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해오던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 대중교통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 홍보하고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실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뉴시스

총선 참여 정당·후보자 선거비용 지출 내역 공개

8월 24일까지 누구나 관할 지역 선관위에 열람 가능 비례의원 당선인은 내달 1일부터 9월 1일까지 열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그 중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누구든지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22일부터 8월 24일까지 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신청할 수 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중앙선관위에 6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열람 및

사본교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첨부서류 중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수입·지출내역 예금통장 사본은 사본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중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선관위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1,116억 1,465만여 원으로 후보자 1인당 평균 9,983만여 원을 지출하였다. 이는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인 1억8,199만여 원의 54.8%에 해당한다.

중앙선관위는 4월 27일부터 전국에 18개의 TF팀을 구성하여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선거비용 축소·누락,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했다. /김진성 기자

“KAL기 폭과 盧정부 조사 때 전두환 힘 작용”

민주 설훈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25일 지난 1987년 발생한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 사건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 시절 실시된 조사 때 전두환씨 세력의 힘이 작용해 진상 규명이 불발됐다면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지난 2007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조사에 대해 “이게 참 대단히 미진한 조사였다”는 게 밝혀져 있지 않냐”며 “그래서 조사가 새로 돼야 된다”고 밝혔다.

지난 1987년 11월29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출발한 KAL 858기는 승객과 승무원 115명을 태우고 서울로 향하던 중 인도양 상공에서 실종됐다. 정부는

북한 공작원 김현희에 의한 공중 폭파 사건이라고 결론지었지만 유가족들은 증언 외 별다른 물증이 없다는 점을 들어 진상 규명을 요구해 왔다.

지난 2007년 진실규명위의 미안마 해상에서의 동체 수색 시도가 불발됐던 데 대해서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과거 정부로부터 영향력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고 본다”며 “전두환·노태우 정권이 갖고 있는 여력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그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진실규명위) 김현희 씨를 만나서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게 불발됐다”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인데 왜 그랬냐고 보면 추론인데 전두환 정권이 갖고 있던 파워가 작용되고 있었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내달 화재·구급 활동 정보 국가중점데이터로 민간에 개방

화재·구급 활동 정보도 국가중점데이터로 민간에 개방된다.

소방청은 행정안전부의 ‘2020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 공모에 선정돼 6월부터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2015년부터 매년 수요조사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활용도와 중요성이 높은 분야를 선정해 개방해왔다. 그간 개방 분야만 96종에 이른다.

2020~2022년 3년 간 46종을 개방하게 되며, 이 중 국가화재정보와 구급 활동정보도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계절별 주요 화재와 피해액, 구급환자 발생 지역, 성별·연령별 구급환자 증상 등이다. /뉴시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행동수칙

자료: 질병관리본부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